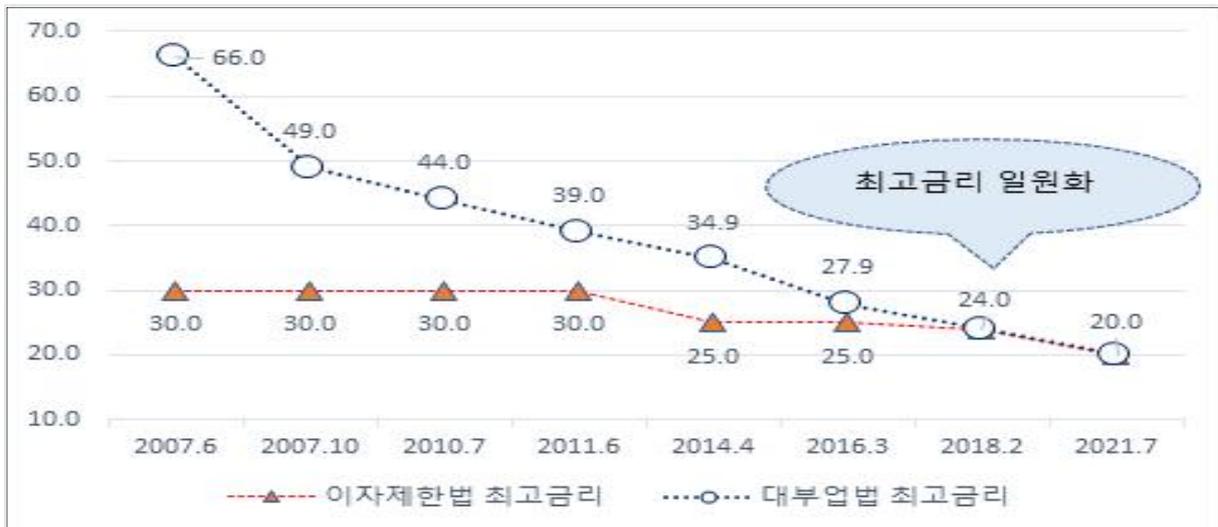


- 7.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% → 20%로 인하 시행
  - 20% 초과 금리 대출자 중 약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,830억 원 감소 예상
  -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기대
    - ('16년말)23.5 → ('17년말) 21.9 → ('18년말) 19.6 → ('19년말) 17.9 → ('20년말) 17.0
  - ※ 자료: 금융위원회, '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' (6.30) 『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』 (5.11)
-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최고금리 강제 인하의 부작용은 이미 명확
  - 손익분기이자율 (통상 22%)보다 낮아진 대부업체들, 저신용자 대출 축소 불가피
    -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최고금리가 27.9%에서 24%로 낮아지기 직전 해였던 2017년 말 247만 명에서 2020년 6월에는 158만명으로 급감
  - 회수가 용이한 담보대출 더 늘릴 경우 담보가 부족한 저신용자들에게겐 악재
    - 대부업체 신용대출, 2016년 말 12.2조원 → 2020년 6월 7.8조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
    - 대부업체 담보대출, 2016년 말 2.4조원 → 2020년 6월 7.2조원으로 3배나 증가
  - 한은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대출이 더 위축될 것이라 경고
    - "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경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"
- '최고금리 인하'는 일자리, 부동산 정책에 이어 또 하나의 친서민 정책 역설(逆說)로 귀결될 것
  - 정부 스스로도 이번 조치로 3만9천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
  - 민간은 정부 예상치의 15배나 되는 약 6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것으로 추정
    - ※ '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' 최철 숙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(2020.10.29.)
  -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확대, 채무자 구제 등의 보완책 정도로 부작용 막기는 한계
- 진정한 '친서민' 금융을 바란다면 무모한 정부개입에서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

올 7월부터 최고금리 24%→20% 인하 시행...최대 60만명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판

단위: %



자료: 금융위원회, 『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』 2021.5.11.

<https://www.fsc.go.kr/in090300/75885?srchCtgr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>